6자회담 재개 '묘수 찾기'

정부, 美·中과 협력 절충안 모색…北 선택 관건

"파국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하우를 동원하고 있다."

이른바 제2차 미사일 위기 국면이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북한을 설득하고 북핵 6자회담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묘수찾기'라는 말로 현 국면을 규정했다.

북미간 직접 대화에 집착하는 북한, 이를 극력 피하려는 미국을 사이에 두고 중재역을 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양국이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설득력있는' 6자회담 재개방안은 북한과 미국의 요구를 절묘하게 절충한 내용들이 골자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전제로 하는 것은 물론이다. 사태 해결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6자회담 개회 전에 중국의 주재하에 북한은 미국과 만나 이른바 대북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갖는다. 물론 이 자리에서 금융제재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이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한 것처럼 '6자회담의 틀내에서 북미 양자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참여하는 3자회동이라는 형식적인 틀도 마음에 드는 방안이다. 물론 북한이 '중재자 중국'의 존재를 애써 무시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2003년 봄 6자회담 전에 열렸던 북.미.중 3자회담에도 중국은 '사회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13개월간의 교착국면을 타개하고 전격적으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낸 지난해 7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김계관-크리스토퍼 힐 양자회동도 그 중간 과정에서 '의장국' 중국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것이 외교가의 정설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28일 한 조찬강연에서 미사일 사태의 해법으로 북한의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북미간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곱씹을 만한 대목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른바 '6·1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내용에 '유의할 만한 대목'이 있다고 판단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미사일 위기 국면이 조성되면서 그 내용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정부는 성명에서 힐 차관보의 방북 초청이 언급되면서도 과거와 달리 '대북금융제재가 해결되지 않으면 6자회담에 복구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풀린 점을 주시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발족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승부수' 민심이반 다잡기

김의장·오해진씨 공동 위원장 체제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생경제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28일 공식 발족했다.

김 의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경제지표는 괜찮다는 여권 전체의 주장과 달리 중산층과 서민은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뼈저리게 확인했다"며 "이 간극을 좁히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김 의장과 오해진 전 LG CNS 사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김 의장의 서울상대 선배인 오 전 사장은 김 의장과 수시로 실물경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관계로, 위원회에 외부의 시각을 반영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위원으로는 원내에서 안병엽, 이목희, 채수찬 의원이 참여하고 원외에서는 조우현 숭실대 교수와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이 합류했다.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회의를 개최하고 공청회나 여론수렴, 당정간 협의 등을 통해 중요한 서민경제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 이를 정책적·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장상·한화갑 공동체제 출범

민주당 여의도 당사서 취임식

민주당 장상〈사진〉 공동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주당의 제2도약을 다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취임사에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배신으로 분열된 정통민주세력을 복원, 오는 2007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이루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했었다"며 "민주당 재건의 최선봉에서 분투, 중도 실용주의 세력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들러리 공동대표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당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 한화갑 대표와 창의적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7·26 보궐선거 성북을 출마설과 관련 장 대표는 "당에 들어올 때부터 출마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재고의 여지도 없다"고 일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비약하는 동중국 현장을 가다 〈3〉 급변하는 투자환경

낮은 인건비·환경 무시는 옛말

중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속도 못지않게 중국의 투자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 초기 최대 매력이었던 낮은 인건비만 생각하고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최근 중국 근로자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데다 중국정부는 자국 노동자들의 권익과 환경보호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나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차이나 드림'은 꿈으로 그치기 쉽다.

정부가 권익· 환경보호 나서

이제 낮은 인건비는 더 이상 중국 진출의 메리트가 아니다.

심양에서 핸드폰 등의 부품으로 쓰이는 연성회로관을 제조하는'MCT'사 관계자는 "현지 숙련 기술자의 월급이 2004년 700위안(9만 1천원·1위안 130원 환산)에서 2년 사이 1천 위안(13만원)으로 43%나 올랐다. 이같은 임금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경영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 의무화와 퇴직금제도의 철저한 적용 등 만만치 않은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최정균(53)심양한국상공회 남부지역 회장은 "최근 중국 당국이 외국기업들의 오염원 배출에 대해 부쩍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중국은 공업용수, 배출가스 등 총량오염원을 조사해 문제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현지 진출 기업들은 환경오염에 대해 크게 신경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장의 카드'는 기술력

여기에다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장의 카드'인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 심양에서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MCT' 관계자는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난해 17%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중국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동종업체들을 따돌릴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면 아예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정균 회장은 특히 현지인과 합자할 경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현지인들은 합자 초기에는 적극 협력하지만 투자기업의 기술과 속사정을 알게되면 다른 마음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갈등이 생겨 재판을 하더라도 4~5년 걸리는 시간 때문에 버티기 어렵고 현지인들의 '꽌시'(關係·관계)에 밀려 결국 한국 투자자들이 손을 들고 말게되죠"

그는 또 중국에서 실패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한국인 특유의 기질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혼자 잘난 체하는 '겉 똑똑이' 행태를 보였다가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한 탓인지 모르는 일이 있어도 절대 남에게 물어보려 하지 않습니다. 갓 중국에 진출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현지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만의 판단으로 고집을 부리다가 위험한 지경에 가서야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는 이미 늦었지요"

철저한 조사 능동적 대처 필수

그는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가장 가까운 한인회나 한국기업 모임 등을 찾아 자문을 구하면 현지 적응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 회장은 또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중국의 개관이나 목적지의 특성과 문화 정도는 미리 공부하는 '성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중국 투자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남경의 금호타이어 전경. 급변하는 중국현지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